

# 혈세로 갚는 나라빚, 4년 후 700조... 1인당 1400만원

##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총 국가채무 1061조 중 67% 차지  
올 426.5조원서 매년 급증 전망  
올 이자비용 16조→2023년 20조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나라빚이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확장재정이 출혈재정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는 재정건전성 확대와 경제모형 개선, 재정준칙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국가채무는 1061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9000억원에 달한다.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이 1인당 1400만원씩 빚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상환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



채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는 외화자산 매입이나 융자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금융성 채무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상환이 가능하다.

현재 적자성 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조8000억원 중 57.6%인 426조5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805조5000억원 중 59.2%인 476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후 2021년에는 887조6000억원 중 61.8%인 548조1000억원, 2022년에는 970조6000억원 중 64.4%인 625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서 이자 지출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총 이자지출은 올해 15조9829억원에서 2023년 20조1517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임시국무회의 후 내년도 예산 513조5000억원을 확정 발표하면서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계는 빚이 늘어나

는 이유는 재정지출 확대 때문이라며 심히 우려하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재정 확대에 대해 "중·장기적 대책이 아닌 당장 눈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서 재정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확대를 추진한다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재정·국세수입은 과다로 예상하고, 재정지출은 과소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 분야는 계획보다 많이 예산으로 확정해 지출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연동방식'으로 수립해 유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전반부는 '고정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구속력을 강화해 중기적 관점에서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경기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확대와 적극적 재정역할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현재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고언했다.

성 교수는 그러면서 "재정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준칙이 필요하다"며 "한 해에 늘어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자의 폭과 부채의 규모 등에 대한 준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예산 확대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재정조달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조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확대는 실제로는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명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 정부는 선심성 복지 등 무조건 (재정)을 쓰겠다는 경향이 있다"며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의 재정 투입은 좋지만, 효율적으로 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우산으로 수놓은 캠퍼스

가을 장맛비가 내린 4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까지 가을 장맛비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연합뉴스

## 금융사, 유사 핀테크 투자 가능해진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제한했던 업종도 미래의 금융업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를 허용한다.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고의가 아닐 경우 면책해 제재가 무서워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도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한진 전자금융과장은 "지금까지 핀테크 랩과 오픈 API 등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협업을 추진해왔지만 보다 강한 협업을 위해선 핀테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은 고유업무와 밀접(직접)

한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기여했는지 유무로 제한돼 미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핀테크 기업은 지분투자과 경영권 인수 등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을 적용해 투자범위를 정보통신기술, 그밖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핀테크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에 포함한다.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필요한 승인 심사도 30일 이내로 줄인다. 기존 금산법은 미승인 시 30일 이내, 보험업법은 2개월 내 회신도록 해 법령·지분별 승인기간이 달랐다. 앞으로 핀테크 기업에 출자하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에 사전 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회신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의 범위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으로 확대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조국, 20년 전 울산대·동국대 '투잡' 의혹

(2000년 3~4월)

교수 '겸직금지' 위반 의혹 제기  
"울산대 사직처리 늦어진 것 같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교수 출신 후보자의 '겸직' 논란은 인사청문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로 조 후보자 역시 이를 피해 갈수는 없을 전망이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그가 대학 교수로 활동하던 2000년 3월과 4월, 전임교원 신분으로 울산대와 동국대 두 대학에 동시에 재직했다.

조 후보자는 1999년 3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울산대에서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를 지냈다. 다음 동국대로 거쳐를 옮긴 조 후보자는 2000년 3월 1일부터 2001년 12월까지 해당 대학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4개 학기를 지냈다.

울산대 관계자는 "조 교수가 4월 30일자로 퇴사했다"면서 "20여 년 전 일이라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동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녀 관련 얘기를 하다 눈을 만지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2000년 3월부터 동국대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대학에 따르면 강의수업 배정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최대 10년이 지나면 폐기한다.

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전임교원의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26조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상 '사외이사' 등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조 후보자가 울산대와 동국대에서 지냈던

'조교수' 신분은 정교수·부교수와 함께 전임교수로 구분되며 비전임교수인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수와는 다르게 '겸직' 허용에 있어서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당시 조 후보자가 양 대학에서 임금을 받았으면 사학연금 이종 납부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계자는 "울산대에 서사직 행정 처리 절차가 늦어진 것 같다"면서 "후보자가 겸직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울산대 관계자는 "어쨌든 겸직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임교원의 겸직은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학교 중 한 곳의) 행정적 착오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규정상 전임교수인 대학 조교수가 두 대학에 동시에 근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경우 두 대학에서 동시에 직무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등 학사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내일 조국 인사청문회 연다... 여야 합의

여야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고유 책무에 대해 그동안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조 후보자 청문

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여부는 청문회를 진행할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는 청문회 전까지 증인 채택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조건 없는 청문회'를 요구했고, 야당은 자료요청·증인채택과 관련 '최소한의 시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

섰다.

여야가 공방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보고서를 사흘 안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청문회 개최 합의는 여야 모두 청문회 무산에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은 청문회 없는 임명을 강행하는 데 부담을, 야당은 조 후보자 검증 기회를 스스로 버린다는 데 압박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석대성 기자